

80년대 이념도서가 추구한 '이념'

사회과학도서의 흐름을 통해 본 80년대 사회사

80년대 출판계를 그 이전 시기와 구별해주는 색다른 '이념도서'의 활발한 출간이었다. 반공이라는 '확진사'의 남용으로 연명했던 역대정권의 통치논리에 대한 '문화적 붕괴'의 한갈래로 자리매김될 이념도서 출간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는 금기의 바리케이트를 철거하며 잃어버린 정신사의 영토를 회복하는 대장정이었다.

익히 아는 바대로 70년대 후반부터 예외되기 시작한 출판문화운동으로서의 이념도서 출간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던 통치체제가 필연적으로 배대시킨 '미운 오리새끼'였다. 4·19 이후 학생운동을 비롯한 지식인 중심의 저항세력이 역사의 주동력으로서 민중을 발견하게 되는 '철이 달든' 시절부터 정권담당층은 이들의 변혁욕구를 탄력성 있게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권 밖으로 추방, 재야세력을 이루게끔 강제(?)하였다.

추방된 지식인 세력은 새로운 정치질서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장을 찾아 나섰고, 그중 일부분이 출판계의 울타리를 넘어와 '골리앗'으로서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다윗의 돌팔매'로 출판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처럼 저항세력이 출판계를 운동적 차원에서 선택한 것은 변혁이론의 창출과 보급에 가장 적합한 매체로 단행본 출판의 유효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실 출판은 소규모의 자본을 갖고도 뚜렷한 경향성을 띤 이념의 상품화가 가능한 분야이고, 이들 대부분이 대학이나 언론매체 종사자였다는 전력에 힘입어 출판분야가 요구하는 전문성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는 점도 주요한 유인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념도서 출간의 경향은 '광주'를 겪게 되면서 엄청난 비약을 이루게 된다. 80년대 문지방에 엮여진 핏자국의 상흔은 동시대 구성원들에게 국가권력의 본질에 대한 회의와 미국이라는 외세의 의미를 심각하게 곱씹게 하였고,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착종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새롭게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욕구를 증대시켰다. 여기서 제기된 '새로운 시각'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듯, 마르크스주의의 도입이었다.

마르크스주의와 사구체논쟁

이념도서는 80년대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반체제적 저항세력의 '지적 오아시스' 역할을 하면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근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이에 정부당국은 이념도서의 확산을 일정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맞불작전'으로 82년 마르크스주의 도서의 간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보다는 비판적 극복을 중용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기 때문에 이미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비판'을 위해서 '소개'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출판운동세력이 이념도서를 양산하자, 85년에는 극약처분으로 이념도서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관금이라는 정부당국의 선전포고에 지하출판이라는 게릴라전법으로 대응하면서 이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출판문화운동은 80년대 초기의 억압적 상황을 뚫기 위한 단초를 무크의 출간에서 찾았다. 5총출범과 더불어 진보적인 잡지들이 폐간되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던 출판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된 무크는, 이후 계간지로 정착하여 그 과도기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무크 창간을 계기로 본래도에 오른 출판문화운동은 초기에 주로 종속이론, 네오마르크스주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등을 활발히 소개하였다. 오랜 기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미국의 기능주의적 사회과학방법론을 극복하고 정치상황의 경직성에 의해 제약되었던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을, 비록 '네오'라는 한정사속에서나마 원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제3세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인식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종속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오해(?)로 인해 이념통제의 감시망을 벗어나 인식의 지평을 확충했지만, 84년경부터 진행된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에 의해 그 한계를 비판받으면서 급속히 쇠퇴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구성체 논쟁이란 ▲세계체제내에서의 한국의 위상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및 국가의 성격 ▲한국사회의 민족문제 등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념도서의 출간경향도 사회구성체 논쟁과 관련된 분야와 마르크스주의의 입문서가 대중을 이루었다.

공적인 금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생능력을 키워온 출판문화운동의 한 정점은 「자본」(이론과실천, 1987)의 출간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적 무기로 받아들



관금과 해금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80년대 우리 사회 변혁의 지향점을 가리킨 '이념도서'는 90년대에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우리 현실을 분석한 연구물이 활발히 출판될 전망이다. 사진은 87년 전면 해금된 이념도서를 특별전시한 서점풍경.

여진 마르크스주의 해방 이후 분단의 고착화과정을 겪으며 초도화된 지 40여년만에 우리 지성사에 복원,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유법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관련도서 출간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원전번역을 필두로 레닌, 모택동 등의 저술도 활발히 소개하였고 소련의 사회과학과 철학서적도 쏟아져 나와 우리시대가 바야흐로 '정치경제학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소문과 호기심으로 얼룩진 '극장의 우상'이었던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의 대상영역으로 끌어올려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국내 연구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 마르크스주의의 폭을 넓게 하였다.

문학평론가 김병익씨는 최근의 한 글(80년대 : 인식변화의 가능성을 향하여, 「문학과사회」 89년 겨울호)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이 우리 학문과 정신에 크게 기여한 부분은 "마르크스주의 시각에 의거하여, 혹은 사회주의와 좌파적 관점에 기초하여, 그리고 그쪽 학자들의 논리와 방법론을 응용하여 우리의 역사와 사회현실과 이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편"하게 한 것이라며, 마르크스주의의 수용이 우리에게 가한 인식론적 변화는 "우리 사회의 기본모순에 대한 논쟁을 진전시키고 우리 역사의 사관적·실증적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무엇보다 학문이 마르크스가 가르친 대로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명제아래 그것들이 우리사회 개혁

의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기를 강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활발해진 근현대사 연구

통치질서에 위대한 것으로 여겨져 줄곧 금기시되어 왔던 진보적인 세계관은 우리 사회 민주적 발전의 기류를 타고 학문적 방법론으로 수렴되어 한국사회가 '선 자리'와 '가야할 길'을 밝히려는 노력의 버팀목이 되었다. 이러한 창조적인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은 분야는 한국근현대사 연구영역이다. 식민지사관의 미망에 갇혀 왕조사 위주의 역사기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관계사학'을 비판하면서,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뚜렷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각 시기의 역사적 과정과 그 해결방안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전개되었다.

근대사연구의 성과는 주로 조선시대 사회경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조선후기 기층민중세력이 양반계층에 저항할 수 있었던 물질 토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본주의 맹아설'을 주장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봉건사회해체에 맹아적으로 존재했던 자생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민중사학계의 '장로'격인 강만길의 「한국근대사」(창작과비평사, 1984)는 조선후기와 개항기에 걸쳐 민중세력이 급격히 성장, 지배체제에 저항하는과정과 외세의 침략에 의해 국민국가의 수립이 좌절당하게 되는 史實을

80년대 출판계를 그 이전 시기와

구별해주는 색다른 이념도서의

활발한 출간이었다. 판금이라는

정부당국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념도서가 확충해 온 '이념의 지평'은

80년대 변혁세력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나침반이었다.

우리 사회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인식물을 제공한 이념도서는

우리 역사와 현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각성제'였다고

볼 수 있다.

서술하고 있고, 「한국현대사」에서는 식민지 통치정책의 실행과정과 이에 대응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추진과정을 살피고, 해방 이후 70년대말까지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는 과정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가 전환기적 열병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 분단구조의 모순에서 기인한다는 의식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으며 확산되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한길사)은 이같은 역사적 각성을 지렛대로 삼아 해방전후의 혼란기 속에서 분단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현대사에 대한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해방직후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한 민족세력의 노력과 미군정에 의한 좌절, 그리고 단정수립과 한국전쟁의 과정 등이 민중사관적인 입장에서 연구되었고, 항일무장투쟁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의 북한사회도 다루고 있어 총체적인 민족사연구의 한 획을 긋고 있다.

소장사학자들의 집단연구 성과도 괄목할 정도로 출간되어 현대 민중사학의 이론적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었다. 공동집필된 이런 경향의 역사서는 전문적인 연구서로서보다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 교양서 수준으로 서술되어 민중사학의 '브나로드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이밖에 재외한인 학자들이나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있는 미국학자들의 해방공간에 대한 연구서도 소개되었다. 국외자적 시각이라는 점, 분단의 원인을 내재적인 요소에서만 찾아 사실상 미국의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반도에 관철되는 과정을 분석, 한국 현대사연구의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북한원전의 '잠입'

재미한인 학자들의 북한방문기 출간으로 물꼬를 튼 북한관련 도서는 학생운동 세력이 주도한 통일운동에 힘입어 북한원전 자체의 출판으로 발전, 우리 출판의 이념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렸다.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돌베개, 1988)을 신호탄으로 우리 지성사에 대거 '잠입'하여 「김일성선집」(대동, 1989)이라는 핵탄두까지 터뜨리며 기존 가치관의 '전복'을 꾀했으나 정부당국의 금서정책이란 철퇴를 피해 다시 지하로 '도주'했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북한원전은 급격하고 무비판적인 소개로 사회 일각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으나,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하는 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견해차를 불문하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1차 자료의 제공이라는 사회사적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북한원전은 그 성격상 크게 3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그 첫째는, 북한 사회체제의 주춧돌인 주체사상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거나 그 전모를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기존의 유폴론은 관념론과의 투쟁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러시아혁명 이후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낡았다고 주장하는 주체철학은, 인간중심의 철학으로서 세계속에서의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제기하는 최초의 철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우리 역사를 이른바 주체사관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역사류이다. 고고학적 탐사를 기반으로 고구려시대에 대한 연구가 깊이있게 진행된 반면, 정권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1930년대 김일성의 빨치산활동을 과장되게 기록하였다.

셋째는, 북한의 혁명논리의 뿌리가 되는 남한사회의 성격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학생

운동권의 일각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모순으로 식민지성이 강조되면서 지도적인 변혁논리로 받아들여진 이론으로서 우리 사회의 성격은 식민지 반자본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운동권의 변혁논리와 맞물려 있는 북한원전의 대량적인 출간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의 한국적 적용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유발시켰다. 그 논쟁은 앞서 이야기되었던 종속이론 : 정통마르크스주의의 대립이 주체사상 : 정통마르크스주의의 논쟁으로 구도가 바뀌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원전의 출간이후 이념도서의 출간경향은, 주체사상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려는 책과 이를 비판하는 책으로 나타났다.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책은 직접적으로 북한의 혁명노선을 부정하는 책과 동구권과 제3세계에서의 논쟁을 소개,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판하는 책으로 나누어졌다.

90년대의 전망

87년 431종의 이념도서를 해금시킨 이후에도 선별적인 금서정책을 고수해온 정부당국은 최근 또 한차례의 금서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85년의 대량 판금조치 때만 해도 '반체적인'이기보다는 '반정부적'이었던 이념도서가 작금엔 뚜렷이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적'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계급적 대립의 골이 깊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결국 체제의 능동적인 변화없이 이념도서의 근절을 바랄 수 없다는 '상식'을 재삼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이미숙씨(27·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는 80년대 출판문화운동이 "이념의 지평을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90년대 출판문화운동으로서 이념도서는 "정치경제학 학습을 통해 얻은 원칙과 방법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연구성과"가 출판될 것이며, 이런 노력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이념적 통일성과 시각의 공유를 전제로 한 집단적인 연구활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권우 기자

社告

本誌 반포가 인상 안내

새해부터 部當 1천원으로 조정

「출판저널」은 1987년 7월 20일자로 창간된 이래 서평 및 신간정보 전문지로서 독자의 저변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제작비와 상관없이 반포가를 부당 500원으로 책정, 지금까지 고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창간 이후 2년반이 지나는 동안 임금상승을 비롯한 제작비의 앙등으로 더 이상 출혈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1990년 1월 5일자(제53호)를 기하여 반포가를 부당 1,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89년 중에 구독신청하신 정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반포가 그대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호분 단위 10,000원, 20호분 단위 18,000원으로 구분하여 정기구독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본지의 저간의 사정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계속 끊임없는 성원과 가르침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9년 12월 5일

출판저널